

오세훈, 헌정 첫 '4선' 서울시장... 건축규제 완화 드라이브

후보시절 공약 취약계층 집중
하후상박형 복지 개선 추진
녹지생태지역 재창조 구상도

2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헌정 역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채 20일 만에 시청으로 돌아왔다. 오 시장이 선거 기간 제시한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은 '하후상박형 복지 제도 실현'과 '서울의 공간 구조 재편' 크게 두 가지다.

이번 선거에서 오 시장은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다. 그가 후보시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을 살펴보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전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선 순위 1위로 내세운 공약은 '안심소득(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복지 제도)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서울'이다.

2순위는 평수를 1.5배 넓히고 고급 내장재를 적용한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순위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시스

유명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플랫폼 '서울런'을 통한 교육 사다리 실현, 4순위는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시립병원 확대 및 기능 강화다.

오 시장이 소외계층 지원 외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지원 임대 수세권 조성, 도심 녹지 확대를 필두로 한 도시 공간 재구성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낸 10대 핵심

공약은 ▲1순위: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2순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쾌속 추진 ▲3순위: 함께 바꾸는 우리동네! 모아주택·모아타운! ▲4순위: 방방곡곡 수세권! 수변감성도시 서울 ▲5순위: 서울 센트럴 파크! 녹지생태도심 쾌속 추진 ▲6순위: 취약계층 안심형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7순위: 금리걱정 털어주는 서울형 안심금리 ▲8순위: 서울형 어린이 놀이공간 대폭 확충 ▲9순위: 글로벌 뷰티산업 허브 구축 ▲10순위: 서울런 2.0 추진

으로, 선관위에 제출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취약계층 지원 공약 중 상당수가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난 것. 기존 1순위였던 안심소득은 순위권 밖으로, 3순위였던 서울런은 10순위로, 4순위였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는 6순위로 내려앉았다.

전과 달리 오 시장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확대 정책을 앞세웠다. 2~3순위에 이름을 올린 신통기획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 바로 그것.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서울시가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결정부터 사업인가까지 적극 개입, 구역 지정 기간 단축을 돕는 제도다. 모아주택은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이고, 이를 확장한 지역 단위 정비 사업이 모아타운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에서 오 시장은 최근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물량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으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은 서울 전역에 흐르는 332km의 물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해 2030년까지 수변감성도시를 완성하고,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등 기존 건축 규제를 완화한 대가로 얻은 공공기여를 공원으로 조성해 서울 도심에 녹지 생태지역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임기 내 63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 규모를 2조17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2일 직무에 복귀한 오 시장은 첫 출근길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다시 한번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서울시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과 엄중함을 느낀다"고 당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약자와의 동행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비롯해 선거기간 했던 약속은 4년 동안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가 많은 변화를 일궈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진보·보수 양분 구도... '百年大計' 새 판 예고

전국 교육감 선거

진보 9곳, 보수 8곳서 승리
혁신학교 등 현안 관심집중

6월 1일 시·도 교육감 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진보 교육감이 9곳, 보수 교육감이 8곳에서 승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국민의 힘이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양분화된 모습이다.

진보교육감은 지난 2014년 선거 13곳, 2018년 선거 14곳에서 승리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자랑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진보와 보수가 각각 9대 8로 마감했다.

그나마 진보교육감이 소폭 앞선 결과지만 전반적으로는 진보의 후퇴, 보수의 약진으로 평가되고 있다. 8년간 전성기였던 '진보교육감 시대'가 막을 내렸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 진보진영의 교육감은 서울 조희연·인천 도성훈·광주 이정선·울산 노옥희·세종 최교진·충남 김지철·전북 서거석·전남 김대중·경남 박종훈 등 9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보수진영 교육감은 부산 하윤수·대구 강은희·대전 설동호·경기 임태희·강원 신경호·충북 윤건영·경북 임종식·제주 김광수 등 8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지역 중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제주는 진보교육감이 유지하던 자리였지만 이번 선거로 교체됐다. 경기도는 교육감 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첫 보수교육감 후보 당선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현직 프리미엄'은 작용했다. 보수교육감의 경우 대구, 대전, 경북에서 재선 및 3선에 성공했다. 진보교육감은 애초에 보수 후보가 출마



하지 않은 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6개 지역 모두가 현직 교육감이다.

특히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보수교육감 후보들의 단일화 무산이 거론된다. 보수 진영의 박선영·조전혁·조영달 후보는 막말 논란 등에 휩싸이며 분열한 끝에 단합하지 못했다.

세 후보의 득표율을 합산해 보면 2위 조전혁(23.4%), 3위 박선영(23.1%), 4위 조영달(6.63%)로 약 53%이다. 이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득표율인 38.1%를 훌쩍 넘는 수치다.

서울 외에도 세종·충남 지역도 사실

상 보수 단일화 실패에 따른 진보의 승리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교육계의 화두였던 혁신학교, 자사고 폐지 등의 사안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선거로 판세가 뒤집혔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 구도의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교육은 선거의 전리품도, 선거 승자가 맘대로 좌지우지해도 되는 도구가 아니다"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오직 학생의 미래를 고민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尹 대통령, 교육제도 혁신 나선다 "반도체 등 미래산업 인재 키울 것"

"재능·적성 살릴 수 있는 교육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반도체, AI(인공지능)와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 개막식 축사를 통해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계 강화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 거대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의 혁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고, 이를 이뤄내는 것은 교육의 힘에 달려있다"며 "새 정부는 교육제도의 혁신을 통해 지식습득형이 아니라 문제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재 양성을 혁신과 성장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발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의적인 교육이 공공교육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혁신에 역량을 모으겠다"며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향해 "코로나의 장기화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어렵고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인재 채용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미래 인재에 투자한다는 신념으로 청년 인재들의 인큐베이터가 돼 달라. 기업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직무교육의 강화는 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기술 변화에 대응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며 "능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이에 필요한 제도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첫 교육 분야 청년 일자리 현장 행보로 500여개 직업계고 학생들과 18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 상담 및 면접 등이 진행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